

멈춰선 ‘복지버스’…농촌의 겨울 “아프면 안돼”

전남 왕진버스·행복버스·어복장터 사업 종료에 의료·복지 공백 우려
사업 재개되는 내년 봄까지 불편 참아야…재정·행정적 대책 마련 필요

신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현우(32)씨는 “섬에서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이란도 모시고 가려면 한 세월이 걸린다. 하루에 네번 뿐인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목포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겨울철에는 더 힘들다”고 했다. 김씨는 “식당을 운영하다보니 식재료가 필수인데 마을에 마트가 없어서 주1회 장터라도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다. 지난 3개월간 매주 ‘어복장터’ 오는 날만을 기다렸는데,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도 시행되려면 겨울을 지나야 해 공백기간이 생긴다니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연말이 되면서 전남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복지를 지원하는 농촌왕진버스, 행복버스, 어복장터 등이 멈춰서게 돼 복지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한 겨울철에 전남 벽지의 유일한 마트이자 병원, 편의시설 등의 역할을 하는 자원책들이 사라지면서 “겨울에는 더더욱 아파서도 다쳐서도 안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실정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왕진버스’는 지난달 말 올해 운행을 종료했으며, 내년 2~3월까지 운행하지 않는다.

해당 버스는 ‘의료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 주민들에게 양·한방, 구강검사, 검안, 물리치료 등 진료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농촌왕진버스가 멈춰서면서 정작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해 겨울철 읍내로 나가기 어려워하는 고령층들은 오히려 겨울에 의료사막화가 심해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섬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어복장터도 예외가 아니다.

‘어복장터’는 신안 당사도와 대거점도, 소거점도, 소악도 등 4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생필품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사업이다.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섬마을 ‘식품 사막화’ 개선을 목표로 시범운영에 나서면서 지난 9월부터 실시했다.

이 사업은 오는 18일을 끝으로 올해 사업을 종료한다. 내년도 사업은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문화 서비스를 신고 농촌 마을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도 겨울철에 운영되지

않는다. 전남도와 전남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섬·산간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이·미용, 복지 상담,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복버스는 지난 2월 보성군을 시작으로 270개 마을을 돌아왔지만, 9일 함평, 11일 영암, 12일 장성, 15일 영광을 찾은 뒤, 16일 장흥군 용산면을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된다.

내년도 사업들에 대한 인력 부족, 운영 기간과 홍보 부족, 의료기관·지자체 협업 보완 필요성 등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농촌왕진버스 사업의 예산이 축소 편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력 확충, 회차 증가,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추가 재원이 필수적이지만, 2026년 예산에는 이런 확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당초 올해 8억 820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추경에서 1억 9000만 원이 감액돼 6억 9400만원만으로 운영됐다. 더욱이 내년 예산은 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계획에 비해 5300여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게 전남도의회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에서는 기존 50회에서 70회 증회돼 운영될 방침이며 추가로 국·도비를 2억 3000만원 가량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행복버스에 대해서는 “겨울철엔 버스 운영 등 각 지역에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 및 자원봉사단체의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인력 및 운영 체계를 보완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봉선동 중학교 폭발물 설치 예고에 대피 소동

광주 봉선동의 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칼부림과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한때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광주남부경찰, 남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소방청 메일로 남구 봉선동의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메일에는 학교를 찾아가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 전원을 운동장으로 일시 대피시킨 뒤 학교 전역에 대한 수색과 안전 점검을 벌였다. 수색 과정에서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학교에 순찰차 2대를 배치해 교내의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은 메일 발신자를 추적 중이며, 발신자를 특정할 경우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재활용품 수거인 방한용품 챙겨요

8일 광주시 북구 중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재활용품 수거인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방한장갑과 넥워머 등 방한용품을 배부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전남대, 이번엔 시간강사에 갑질?

18년 근무 강사 퇴직금 지급 대법 판결에도 버티며 ‘부대항소’
대학측 “다툼 여지 남아 제기”…대학원생 갑질 이어 잇단 논란

국립대인 전남대가 18년 넘게 일한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남대는 대학원생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퇴직금을 두고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남대에서 시간강사로 18년 넘게 일해 온 50대 A씨는 지난달 11일 대법원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8년 6개월동안 전남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하지만 전남대는 A씨에게 퇴직금을 주기를 거부했다. A씨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속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학기별로 주당 3~12시간씩, 주로 6~9시간 안팎의 시간을 강의해 왔다. 강사법상 강의 활동에 대한 근로 시간은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강의시간의 3배수로 계산해야 하므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전남대 측은 “내부 규정상 강의 수반 업무는 별도의 추가적인 업무가 아니라, 강사가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강의 업무에 포함된 것”이라며 “강의 준비금은 1학점당 4000원씩 강사료에 이미 반영했으며,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는 말은 업무와 근로 시간, 대학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상당히 달라,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을 3배수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지법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8일 A씨 손을 들어주고 퇴직금 45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국가(전남대)에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전남대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이유서를 기한보다 이를 늦게 제출해 항소 각하됐다. 전남대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달

11일 기각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전남대는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에 또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해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 항소심과 똑같은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A씨가 지난 1일 전남대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전남대측은 퇴직금 지급은커녕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도 신청했다.

A씨는 “내가 비정규직 교원이 아니라 정교수였으면 이렇듯 피말리게 소송전을 벌였겠는가.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갑질과 다름없지 않느냐”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퇴직금조차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항소는 대학 자체에서 내린 판단이 아니라 상급 기관, 검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비정규직이라서 항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